

“초등학교 앞 전자담배 매장 있는데 왜 못 막나”

합성니코틴 제품 ‘담배 아냐’ 허점
초·중·고 200m 내에서도 영업 가능
학부모 “왜 규제 없는지 이해 안가”
“청소년 보호권 위해 법 규정해야”

“학교 주변에 전자담배 가게가 있는게 말이 되나요.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질까 봐 불안하고 애시당초 이게 왜 허가가 났는지도 모르겠어요.”

담뱃잎을 원료로 하는 경우에만 ‘담배’로 규정하는 현행법 때문에 화학물질로 만든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광주지역 초·중·고 인근에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업체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지만 관련규정은 요지부동이어서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속만 타들어가는 상황이다.

30일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효동초등학교 인근. 학교에서 몇걸음 걷지 않았음에도 ‘전자담배’라는 대형 글씨가 쓰인 간판이 바로 눈에 들어온다. 이곳은 간판뿐만 아니라 광고성 전단지와 담배처럼 보이지 않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진이 붙어 있다.

같은 날 찾은 광주 동구 지산동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곳 전자담배 매장은 학교 정문에서 보면 ‘전자담배’라는 문구가



30일 오전 광주 남구 진월동의 초등학교 주변 전자담배 가게. 한 학생이 하굣길에 전자담배 가게 앞을 지나고 있다.

보일 정도로 가까웠으며 가게 외벽에는 홍보 포스터들이 여러 장 붙어있었다. 학부모들은 학생들이 자극적인 유혹에 쉽게 노출될 우려와 함께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승일(45)씨는 “중·고등학생들이 아파트 단지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종종 본다. 이렇게 학교 앞에 버젓이 전자

담배 가게들이 있으면 학생들이 호기심을 갖고 구매를 하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마냥 방지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김영미(40)씨도 “혹시나 우리 아이들이 주변 친구들이나 매장에 붙어있는 광고들을 보고 구매할까 봐 걱정된다”며 “왜 법적으로 규제가 이뤄

지지 않는지 이해가 안간다”고 말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법의 허점 때문이다. 학교 인근 유해업소 단속은 교육환경보호법과 청소년보호법 등에 규정돼 있으며 절대보호구역(직선거리로부터 50m)과 상대보호구역(절대보호 구역을 제외한 직선거리로부터 200m)으로 나뉘어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학교 주변 보건·위생, 안전, 학습 등에 해를 끼치는 위험시설과 유흥업소, 숙박업소, 게임제공업소 등은 입점할 수 없다. 담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다. 현행 담배사업법상에 따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을 취급한다. 즉 화학물질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유해물질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는 몇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세 차례 논의됐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국회가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되려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에서 계류 중인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일반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 이성규 센터장은 “전자담배 회사는 화학물질로 만든 니코틴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담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전자담배 등 유해업소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 들어올 수 없도록 청소년들을 지킬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이정준 기자

광주노동청, 에어컨 설치 사망 ‘무혐의’ 결론

중처법 위반 인과관계 불충분 노동단체 “사측 면죄부” 반발

광주노동청이 폭염 속 작업 중 숨진 고양준혁 씨 사건에 대해 회사 관계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30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폭염특보 속에서 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다 쓰러져 사망한 20대 노동자 고양준혁 씨의 사건을 수사한 결과, 회사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노동청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대표 등 관계자들은 최근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동청은 유가족 고발로 10개월여 수사를 이어왔으며,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법 위반 일부 정황이 확인된 했으나 해당 행위와 사망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노동청 관계자는 “유해 위험 개선 조치

와 평가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이를 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결론에 대해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는 “폭염에도 충분한 보호 조치를 했다면 회사에 사실상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반발했다. 단체는 다음 달 1일 오전 11시 광주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단체 관계자는 “제2의 양준혁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이번 결정을 강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해 8월13일 전라남도 장성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했다. 당시 동료 2명과 작업하던 양씨는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날 숨졌다.

유가족은 회사 측이 폭염특보 상황에서 적절한 휴식과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고, 119 신고도 늦었다고 주장하며 중처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정준 기자

전남경찰, 마약 밀수·유통 태국인 32명 무더기 구속

2000명 투약분 압수

무등록 차량(대포차)을 이용해 전국을 돌며 마약류를 유통·판매한 태국인 총체과 판매책 일당 32명이 무더기 구속됐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태국인 32명을 전원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해외에서 밀반입한 필로폰과 아바 등을 대포차량을 활용해 전국 각지에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단순 투약사범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6명은 조직적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국내 총체과 중간 판매책, 소매 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정원과 출입국사무소 등과 공조해 국내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이 마약을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광주·전남을 비롯한 경기, 충남, 전북 등에서 일

당을 순차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2200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 67.7g(2억2000만원 상당)과 아바 467정(2300만원 상당)을 압수하기도 했다.

아바는 강력한 강성 효과를 가진 필로폰과 카페인의 합성물로 대부분 태국에서 제조·유통한다.

경찰은 태국 마약류 공급책에 대해 국제공조를 요청해 추적에 나서는 한편 공범과 투약 사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유철 기자

5·18 설립동지회 “이사장 해임 촉구 논란”

“이사 선출 개입·추천서 위조 의혹”

5·18 기념재단 설립동지회가 30일 원순석 이사장이 재단 이사 선출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해임을 촉구했다.

동지회는 이날 오전 광주 서구 5·18 기

념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 이사장이 지인인 특정 후보의 추천서를 위조해 동지회 추천 이사로 선출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 이사장은 21대 대선 당시 이사장 직함을 내세워 특정 정당의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는 등 본연의 공적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더는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원순석 이사장은 “추천서를 위조했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동지회가 고발하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박했다.

현재 5·18 기념재단은 다음 달 임기가 끝나는 원 이사장의 후임 이사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공모를 진행 중이며, 이 과정에서 동지회와의 갈등이 표면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우 기자

여수 창고서 불… 1600만원 재산피해 추정

전라남도 여수시 한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0일 여수소방에 따르면 지난날 29일 오후 5시52분께 전남 여수 울촌면 월산리 리프트 대여를 하는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해 46여분 만에 진화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9대, 인력31명을 동원해 불을 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창고 내 외벽이 그을리는 등 소방추산 16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정준 기자

